



문서번호 : 17-04-사무-6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민변][논평]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2017. 4. 20.(목)

전송매수 : 총 2매

[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알파팀’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그 성원들에게 온라인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권옹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 또한 국정원이 ‘알파팀’의 팀장이었던 자가 대표로 있는 우파단체의 설립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 보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기도했던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 여론조작을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알파팀’에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거침없이 여론조작을 시도해온 국정원의 ‘꼼꼼한’ 일처리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밝혀진 국정원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댓글부대’의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뢰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집권세력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시민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정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과 비밀운영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차원이 다른 인·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막강한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위반행위는 다른 행정조직의 그것보다 훨씬 심대한 해악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의무위반 처벌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그것보다 훨씬 중한 것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

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특정 정권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훼손하는 국가 기강문란행위의 정점인 동시에 국정원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먼저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그동안 정보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감춰져왔고 시민들은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거의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이미 고발했거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검·경이 이번 사건마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수사를 게을리한다면 사정기관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그 예산안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사실상 국정원 임의로 예·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태생적 폐쇄성으로 인해 원장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되는 내부 문화도 문제이다. 직원들이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을 통제하고 위법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부 이관하여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장미 대선이 곧 치러진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길 원하고 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의 전위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